

민주 '당무 개입' 윤 대통령 고발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지시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관섭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을 접수한 후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서영교, 강병원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사퇴 요구' 선거법 위반... 대통령 정치 중립 의무 어겨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지시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이날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을 냈다.

민주당은 이 실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이 공권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85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이다"며 "더욱 모범을 보이셔야 하는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전에 개입하는 등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 개입을 통해 공전에 개입해

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내가 거절했다'는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실이 공전에 개입하고 당무에 개입했구나'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권력 싸움을 하는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공직선거법 9조, 공직선거법 85조, 정당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부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련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위법한 선거 관여를 계속하면 과거의 검사, 조사자 신분에서 이제는 책임을 넘어 피조사자, 피의자, 법정에 피고

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국회의원을 선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암울한 유신시대, 왕 노릇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간사도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부, 특히 그 수반인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선거법 위반을 엄히 처벌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사퇴를 거부한다고 명백히 말함으로써 당무개입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간사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선거법 위반을 자행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고발했고, 여기에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외 없다는 것을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 3명 단일화 예고

김성진·정재혁·최치현 시의회서 회견... "정책 공약 연대"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 3명이 정책을 공유하며 단일화에 한발 다가갔다.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과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은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큰 틀에

서 후보 단일화에 대해 합의했고 민주당 경선 일정에 맞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단일화 논의 과정 중 지역과 국가를 위한 정책을 공유하기로 했다"며 "지역 현안이 많지만 행동으로 실천한 것은 적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어떤 후보가 (공천) 되더라도 반드시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청년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경제 정책, 정치 개혁 내용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후보들은 청년 정책으로 만원 주택 1000호 시범 추진, 공공기관·공기업 청년 의무 고용 3%에서 7%로 확대, 광주형 미취업 청년 지원 카드 도입, 청년공공 임대주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들의 단일화 시점은 민주당 컷오프(경선 배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 간 '고발 논란' 공방

'허위 학력 의혹' 노형욱 예비후보 '특정 후보 지지자가 고발' 회견 정진욱 "내 캠프 사람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비방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하겠다고 연포했음에도,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서 예비후보 간 '고발 논란'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오는 6일 민주당의 후보 공천을 위한 예비후보 컷오프(공천 배제)를 앞두고 예비후보들 간 '전투구'는 더욱 극심해지는 모양새다.

30일 지역정계에 따르면 오는 4월 총선에서 광주 동남갑 출마를 선언한 노형욱 예비후보와 정진욱 예비후보 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학력 허위 기재' 논란에 휩싸인 노 예비후보는 이날 입정문을 내고 "지난 29일 허위 학력 표기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선관위에 고발한 시민단체 공동대표는 특정 후보의 지지자"라며 기자회견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노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주도한 광주전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이주연은 정진욱 예비후보의 공식 시인 특보로, 후보의 선거 캠프에 참여하

고 있고, '아름'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난해부터 정 예비후보를 홍보하고 있다"면서 "정 예비후보의 당선을 위해 시민단체 이름을 빌려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깨끗해야 할 선거 문화가 비방으로 얼룩져 유권자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광주 동남갑 모든 예비후보의 '클린 선거 협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시민행동은 지난 2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위가 없어도 당선될 목적으로 출판기념회 저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해 유권자를 속였다"며 노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표시 죄 위반 혐의로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정진욱 예비후보는 "이주연 공동대표는 페이스북 등에서 진보적인 사람의 글을 소개하는 시민주동기일 뿐 캠프 사람이 전혀 아니다"며 "클린 선거에는 동의하나 학력 허위 기재에 대한 검증은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거절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각 선거구에서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간 인신공격과 고소·고발 난무 등 과열 경향이 벌어지자 "국회의원 입후보자 간 인신공격과 상호 비방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총선 브리핑

송갑석 "민주당 총선 승리로 윤 정권 심판"

광주 서구갑 3선 도전

송갑석 국회의원(민주·광주 서구갑)이 3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3선 도전을 위해 뛰어 들었다.

송 의원은 이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에 등록하고 "더 큰 광주, 더 큰 정치! 광주대표 송갑석"을 표어로 내걸었다.

그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심판하고 민주 정권을 탈환하겠다"며 "말 할 때는 해운 국회의원, 할 일을 해낸 광주대표 송갑석이 거침없이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광주시 서구 세정아울렛 322호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광주 군 공항 특별법 입법, 무등산 정상부(인양봉) 개방, '제2의 판교밸리' 도심융합특구법 입법 등으로 굵직한 지역 현안을 풀어냈다고 평가받는다. 2018년 국회의원 재보

궤선거에서 당선된 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송 후보는 3선을 노린다. 그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민주당 최고위원, 전략기획위원장, 대변인, 광주시당 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역임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강은미 "이태원특별법 거부 정권 심판 나설 것"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

4·10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 서구를 출마를 선언한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비례)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켜야 할 국민의 건전한 여사와 장모뿐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한파에 오체투지 하며 절규하는 유족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호소는 무시한 채 거부권을 마음대로 쓰는 윤 대통령에게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들이 절규하며 원하는 것은 배상이 아



니라 진상규명이다"며 "선심 쓴듯 배상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개탄스럽다. 특별법을 거부한 윤 대통령도 참사를 발생시키고 은폐·축소한 공범"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은 사망자 159명의 꿈과 유족들의 일상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 심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창호(샷시)교체